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 검토 및 대응방안 모색

2020.6.19.(금). 10:00~13: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일본 산업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9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내용과 문제점	25
김청중(세계일보 일본 특파원)	
산업유산국민회의 정부 제출 보고서 검토	29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과제	33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明治産業革命遺産問題についてのこれまでの 取組みと今後の課題	40
中田光信(나카타 미쓰노부,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시간	발표
개회식	10:00~10:10	개회사(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인사말(서은지,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발표	10:10~10:30	사회 : 서종진(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산업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10:30~11:00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내용과 문제점 (김청중, 세계일보 일본 특파원)
	11:00~11:10	산업유산국민회의 정부 제출 보고서 검토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11:10~11:20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과제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토론	11:30~13:00	사회 : 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
		야노 히데키(矢野秀熹, 강제동원 공동행동), 전진성(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장), 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조건(동북아역사재단), 발표자 전원

* 세미나 내용은 일반 공개는 하지 않고, 언론에 현장 공개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일본 산업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일본 산업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의 이행상황¹⁾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1. 산업유산에 관한 권고와 국제 기준

1) 권고사항 g호

- (1)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의 g호는 “유산에 대한 설명을 위한 해석전략을 수립하고, 각각의 유산이 어떻게 ‘현저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로 약칭함)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일본의 산업화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을 특히 강조하고, 또한 각 유산의 전체의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이 권고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주가 달려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4. g)에 언급대로 각 유산의 역사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전략’과 관련해 이번 회기의 약식 회의록에 포함된 일본의 성명(document WHC-15/39.COM/INF.19)에 주목한다.”
- (3) 이 각주에서 언급된 일본의 성명은 한국정부와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해 동원되

1) 이 보고는 김민철, <일본 메이지산업혁명유산 후속조치 이행실태 조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주요국 유산 동향 연구>>, 2019.11, 85~110쪽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정부가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등재결정문 내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정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코모스-티키 공동원칙²⁾

(1) 산업유산은 그 특유의 성질, 현대의 경제, 법, 문화, 환경 측면과 밀접하게 관계하기 때문에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위에 ICOMOS(국제기념물유적회의)와 TICCIH(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가 2010년 10월 8일 ‘산업유산 유적, 구조물, 지역 및 경관의 보존에 관한 ICOMOS - TICCIH 공동원칙’(Joint ICOMOS - TICCIH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structure, areas and landscapes)을 채택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디뉴 분바루 전 이코모스 사무국장이 이 공동원칙을 일본정부에 제공했고, 가토 교코 등이 2011년 1월 14일 일역하여 산업유산 보존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원칙은 전문과 정의, 대상, 보존 방법 등을 다룬 1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속 인간사회의 유산의 일부로서 산업유산의 기록, 보호, 보존 및 평가에 일조’하기 위해 만들었다.

(3) 공동원칙은 산업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정의 : 산업유산은 장소, 구조물, 복합시설, 지역 및 경관과 공업생산 과정, 원재료 채취, 원재료의 제품 가공, 관련한 에너지와 수송 인프라, 과거 또는 현재 진행 중이라는 증거를 제공하는 관련 기계·대상물·문서로 구성한다. 산업유산은 문화와 자연환경

과 깊은 연관을 반영한다. 그것은 공업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고대의 것이나 현대의 것이나 모두 자연에서 얻은 원재료와 에너지·수송네트워크에 의존해서 생산 활동을 해 널리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는 일이다. 산업유산에는 유형의 것(동산과 부동산)에 다 무형의 것, 예를 들어 기술 노하우와 노동조직과 작업자, 공동체의 생활을 만들고 사회와 세계 전체에 커다란 조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복잡한 사회적·문화적 유산이 포함된다.”(밀줄-인용자)

공동원칙에서 정의한 산업유산은 기술적인 것만 아니라 유산과 연관된 인간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메이지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유산으로서 접근하는 태도로 볼 때, 이러한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2. ‘보존상황보고서’와 일본의 해석 전략

1) ‘보존상황보고서’³⁾의 구성

(1) 일본 내각관방은 2017년 11월 3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유산: 철강·조선·석탄 산업”의 “보존상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Japan) ID: 1484)를 제출하였다.

(2) 이 보고서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의 등재결정에서 제시된 8개의 주요 권고사항의 진척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 보고서는 총 849페이지로 보고서 본문(1~58쪽)과 참고정보를 포함한 부록(59~849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제노동과 관련되는 결정문 권고사항 g호

2) Joint ICOMOS - TICCIH Principles for the conserv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structure, areas and landscapes, https://www.icomos.org/Paris2011/GA2011_ICOMOS_TICCIH_joint_principles_EN_FR_final_20120110.pdf.

3) Cabinet Secretariat, Japan, “State of Conservation Report -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Japan) (ID: 1484), http://www.cas.go.jp/jp/sangyousekaiisan/pdf/state_of_conservation_report.pdf.

와 관련된 사항 역시 위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기술되고 있고, 부록에 특히 해석전략에 관한 감사 내용을 담은 국제자문보고서가 실려 있다.

2) 일본정부의 해석전략

(1) 일본정부가 제시한 해석 전략에 관한 프로그램 일정표(49~50쪽)

임무	(사업)설명	책임	일정표
(1)	모든 구성부분에 걸친 일관된 OUV 펼치기	내각관방, 지자체	2018회계연도부터
(2)	각 유산의 전체역사 업데이트	내각관방, 지자체	2018회계연도부터
(3)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됨
(4)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 설립	내각관방	2019회계연도 내
(5)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해석에 대한 인증프로그램 검토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18회계연도부터
(6)	인적 자원 훈련 프로그램들과 훈련매뉴얼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17회계연도 내
(7)	세계유산 루트(Route)	세계유산루트추진협의회	계속
(8)	현장 및 온라인 해석(공적 접근이 안되는 나가사키 유적들[제3 도크, 자이언트 캔틸레버 크레인])-특히 버추얼 방문을 위해 Scottish Ten이 개발한 3D 디지털 자원으로 생성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계속
(9)	현장 및 온라인 해석(공적 접근이 안되는 나가사키 유적들[고스게 슬립 도크와 군함도])-특히 탄광의 디지털 재구성을 위해 Scottish Ten이 개발한 3D 디지털 자원으로 생성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계속

(2)상기 단계에 따른 자세한 해석전략(발췌, 밑줄은 원문)

(1) 모든 구성자산에서 일관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OUV)의 공통 전시를 전개

설명 전략에 근거하여 모든 구성자산에서 일관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공통 전시를 실시한다. 모든 관계자가 방침에 합의하고 브랜드 느낌이 있는 세계유산 스타일로 통일적으로 전시를 코디네이트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2)·(3) 노동자에 관한 정보수집을 포함한 각 시설의 '역사 전체'에 관한 진척

내각관방의 '가동자산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유식자 회의' 위원, '메이지일본 산업혁명유산' 등록에 관한 이코모스 사정(査定)에 참여한 국제 헤리티지 전문가, '설명과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국제 이코모스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의 조언에 의해 이하 4개의 방침이 제시되었다.

- 1) 현저한 보편적 가치 설명에 중점을 둔다: 세계유산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각 시설에 등록된 자산의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다른 관련하는 문제와 혼동하지 않고 명확히 설명한다. 그런 다음 권고 g)를 이행한다.
- 2) P.40에 기재된 현저한 보편적 가치 대상기간(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이외의 각 시설의 '역사 전체' 범위는, 1850년대 이전과 1910년부터 지금까지의 2개로 나눌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각 구성자산의 배경 이해를 보완하는 지역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역사 전체'의 범위를 좁힌다. 또한 각 구성자산이 입지하는 지역의 역사 전체 해석에 대해서는 2차자료 수집이나 증언 수록 등 질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적당하고 적절한 미디어를 통해 어느 단계에서 공표한다.
- 3) 산업노동 전시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을 전제로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대상기간의 일본 산업노동에 중점을 두며 해당 대상기간 이외의 산업노동에 대해서는 제2차대전 중에 일본 정부로서도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는 징용정책을 실시하였고 전전·전중·전시에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가 일본 산업 현장을 지탱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에 힘쓴다.
- 4) 상기 방침에 근거하며 조선인 노동자의 징용정책을 포함하는 전전·전중·전시의 재일조선인에 관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이상의 방침을 토대로(상기 1)~4)의 각각에 대해) 이하 자세한 진척상황과 타임 스케일을 설정한다.

1) 2016-17년도에 계획을 책정하고 2018년도 이후에 내각관방의 조정에 의한 방침 하에서 모든 구성자산에서 일관성 있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의 설명을 실시한다.

2) 특별히 위탁한 '설명 감사'에서 복수의 자산에서는 이미……'역사 전체'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익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이후 갱신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산업노동의 이해를 촉구하는 자료로서 추천문서 중 239쪽에 '야마모토 사쿠베(山本 作兵衛)의 탄광기록화 및 기록문서'가 소개되어 있다. 본 기록화 및 기록문서는 '메이지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추천 과정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억'으로 신청되어 등록된 경위를 포함해서 '메이지일본 산업혁명유산' 설명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기록화 및 기록문서는 야하타에 코코스 원료를 공급하는 치쿠호(筑豊)의 지난 탄광노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현재는 세계유산 관련자산인 구 미쓰이 다가와(田川)광업소 이타 다테(伊田)수갱노(豎坑橋) 및 동 제1·제2 굴뚝과 같은 부지 내에 설치된 다가와시 석탄·역사박물관 등에서 전시되고 있다.

3) 1차사료나 구두증언에 근거하여 적절한 경우 산업노동 전시에 대해서는 2018년도 이후에 갱신할 예정이다.

4) 내각관방은 산업노동에 관한 1차사료를 2019년도 내를 목표로 도쿄에 설치 예정된 '산업유산 정보센터'에서 일반 시민에게 공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구두증언, 출판물 조사, 지금까지 거의 검토되지 않았던 1차사료 조사를 포함하는 많은 조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4) '산업유산 정보센터' 설치

제39회 세계유산 위원회 결의(39COM 8B.14)의 채택 때 권고 g)의 각주로 일본 정부의 성명 기록이 언급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2019년도 내를 목표로 종합적인 정보센터로서 '산업유산 정보센터'를 도쿄에 설치할 방침이며, 그러기 위한 비용을 2018년도 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 센터는 산업유산 보전의 보급 계몽에 공헌하는 '싱크탱크'로 '메이지일본 산업혁명유산'의 자산 전체를 중심으로 하며 산업노동을 포함한 산업유산에 관한 다른 정보도 발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검토 중이다.

(5)~(9) 생략

(3) '전체의 역사'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목된다.

“임무(2)…각 구성부분의 위치/장소에 관한 전체 역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주요한 역사문서의 수집과 구술증언의 채록 등 높은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연구의 결과는 어느 단계에서는 적절한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한다.”(51 쪽, 밑줄은 원문)

– 한국 노동자 관련 정보 수집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한국 노동자 관련 정보 수집 담당으로 산업유산국민회의를 지정하였다.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홈페이지(<https://sangyoisankokuminkaigi.jimdo.com/>)에 군함도에서의 한국인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동영상 3편(“누가 오해를 확산시켰는가”, “누가 군함도의 희생자인가”, “누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는가”)을 게재하고 있는 것에 보듯이, 한국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 한국인 노동자 관련 자료 수집을 의뢰하는 것은 강제동원 실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임무(3) OUV(‘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초점을 전제로 산업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의 해석은 OUV기간 동안 일본의 산업노동자들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한편 OUV기간 외의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국가총동원법 하에서 일본정부가 노동자들의 징용정책을 이행했다는 사실과 전쟁 전과 전쟁 동안 그리고 전후에 일본의 산업들을 지원한[supported] 한반도 출신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이 설명에는 2015년 7월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 사토 구니(佐藤地)가 발언한, “a)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b)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brought against their will), c)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forced to work), d)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중 d)만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강제동원 문제를 한국인 노동자 문제로만 축소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동원”을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징용정책이라는 제도적인 문제, 즉 전쟁을

수행한 모든 제국주의 국가에 해당되는 문제로 희석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보존상황보고서'의 권고 이행 정도

(1)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등재결정이 난 지 2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전체의 역사'에 관한 기초적인 윤곽조차 세우지 못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지극히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강제로 노역한 사실' 또는 강제노동이 해석전략의 핵심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국제전문가를 동원했다고 하는 해석 감사에서도 강제노동 문제를 포함한 '전체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세계유산 홍보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에 그치고 있다.

셋째, 노동자, 징용정책,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한 폐쇄적인 조사연구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서 수집과 구술증언 채록도 뒤에서 검토할 가토 고코의 발언이나 '군함도의 진실'에서 볼 때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일본정부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메이지유신과 산업화의 찬미와 국가 방위를 강조하는 국수주의적, 군국주의적 해석에 머물러 있다.

(2) 이러한 각 지역에 대한 이해는 도저히 '전체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겠다는 것도 알맹이 없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의 역사'를 회피하고 외면하기 위한 가식적인 변명과 알리바이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3. 42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

1) 보존상황보고서의 보고와 위원회 결의

(1) 2018년 6.24~7.4 바레인 마나마에서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가 개최되

었다. 총회를 준비하는 유네스코 사무국은 일본을 포함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권고(39COM 8B.14)를 받은 회원국들의 이행 경과보고를 취합한 뒤 ICOMOS, IUCN 등 관련 전문기구의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하였다.

(2) 일본이 제출한 '보존상황보고서'를 심사한 위원회는 다시 일본정부에게 2019년 12월 1일까지 수정한 보존상황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 결의하였다.(42COM 7B.10)

2) 위원회 결의의 권고 g호에 관계하는 부분⁴⁾

- 7. 설명이 전체 시설에서 준비되고, 디지털 형식 툴(tool)이 개발되는 한편, 개설 예정인 정보센터를 포함해서 더욱 개선이 있을 것을 거듭 유의하고;
- 8. 정보센터가 완성되는 대로 설명 전체에 대해 다시 보고하도록 체약국에게 다시 요청하고;
- 9. OUV에 의해 포함되어 있는 기간과 그 이외의 기간도 포함해서, 자산의 역사 전체 설명이나 디지털 형식의 설명 자료에 관한 작업을 이어서 할 때 설명 전략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고려하도록 체약국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 10.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 11. 결의 39COM 8B.141을 완전히 이행함과 동시에, 2020년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에 의한 심의에 내기 위해 2019년 12월 1일까지 자산 보존상황과 상기 이행상황에 대해 갱신한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도록 체약국에게 다시 요청한다.

- 세계유산위원회는 결의에서 '보존상황보고서'가 권고 이행에 미흡하다고 보고 '설명 전략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주요 '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단체나 NGO, 전문 연구자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한 바 없다. 있었다면 강제노동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주민이나 연구자들뿐이었다. 이는 위원회의 결의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위이다.

4) WHC/18/42.COM/7B.Add.2, p.7. 밑줄은 인용자.

4. 제언

1.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발단이 되어 한일간의 경제전쟁과 군사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사태가 전면화·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와 우익 단체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여론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배상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유산에 대한 기억·기념을 둘러싸고 ‘식민지배 책임’과 ‘강제노동’ 문제가 국제적인 논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2. 일본정부와 우익단체의 대응방향은 ①국제법상 강제노동 부정론 제기, ②강제동원·강제노동·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역사 자료와 증언 조사와 수집, ③국제무대를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한일 시민사회는 세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① 국제법상 강제노동 부정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과 국제법의 이론적 발전과 사례의 수집·분석이 필요하며,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문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 학자, 역사학자, 국제정치학자와 인권 전문가와 조사·연구단체 간의 협업이 있어야 한다.
 - ② 강제동원·강제노동·민족차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은 풍부할 정도로 많다. 그러나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강제동원 관련 국가기구가 조사했던 피해자료와 증언들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청산의 1차 목적이 진실 규명이다. 그런데 피해를 밝히기 위해 조사했던 자료들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못한다면 진상규명의 목적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 일들이 ‘개인 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현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③ 강제동원·강제노동·민족차별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은 풍부할 정도로

로 많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영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여 유네스코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2015년 등재를 전후해서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회원국에게 피해 실태를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여 강제노동이라는 문제를 환기시킴으로써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강제노동 부정론을 확산시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처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강제노동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가 2015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번역하여 ILO에 제출하거나 민주노총·한국노총이 2018년의 대법원 판결문 의견서를 ILO에 제출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3.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진상규명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 관련 기업에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의 공개를 요구하고 수집에 나서야 한다. 큐슈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탄광 자료, 후쿠오카 유초은행 지점에 보관되어 있는 한국인 노동자 저금통장, 일본 지자체에 있는 화장증명서 등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 요구는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유족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할 유품이다. 피해자 유족 개개인이 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일본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4.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상황을 주도해 나갈 방안 중 하나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민간이 참여하는 ‘강제노동 한일 공동조사팀’을 구성해서, 그 조사를 기초로 도쿄에 설치되는 정보센터에 ‘전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는 안이다. 이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취지에도 부합한 일이며, 공동의 기억과 유산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2001년 한일공동역사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유산위원회도 한국 정부의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라 판단된다.

5. 강제동원·강제노동 해석문제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 연합국 포로를 포함하는 다자간 문제임과 동시에 인권 문제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의 동원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동원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동원’도 총동원법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인과 연합군포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일본이 강조하는 1차 사료는 가해자가 기록한 자료로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목소리와 가해자의 목소리를 같은 무게로 병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요약]

-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제4항의 g호 권고사항과 이코모스-티키의 공동원칙은 산업유산이 장소와 시설, 기술 등 공업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노동조직과 공동체의 생활에 변화를 준 사회적·문화적 유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메이지기 산업혁명 시설을 세계유산으로서 접근하는 태도를 볼 때, 이러한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 정부가 2017년에 제출한 ‘보존상황보고서’에는 일본 정부의 해석 전략이 들어있다. 해석 전략 중 특히 ‘전체 역사’와 관련해서는 조선인·중국인 강제노동과 민족차별 문제를 다룬 역사 자료나 피해자의 증언 등은 수집하지 않고, 오히려 강제노동·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자료와 구술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어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무시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하려는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18년 제42차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게 ‘보존상황보고서’가 권고 이행에 미흡하다고 보고 ‘설명 전략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고려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2019.12.1까지 갱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주요 ‘관계자’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단체나 NGO, 전문 연구자와 단 한 차례도 대화를 한 바 없다. 있었다면 강제노동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주민이나 연구자들뿐이었다. 이는 위원회의 결의를 사실상 무시하는 행위이다.
-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하는 노무자에 관한 정보수립”을 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위탁하였다.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된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조사보고서(2016, 2017, 2018 각년도)는 많은 용역비에 비해 터무니없을 만큼 부실한 데다 내용 또한 편향적이다. 특히 2018년도 갱신보고서는 전체 분량의 2/3를 산업사에 할애하여 기술이전에 초점을 두었고, 1/3은 미이케탄광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구술을 실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 먹칠하여 증언의 맥락을 알 수 없게 하였고, 조선인 강제노동과 민족차별을 부정하는 유도성 증언으로 일관되어 있다.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모두 전쟁포로로 인식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결여되어 있다.
- 일본 산업혁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사령관 역할을 했던 가토 고코가 내각 참여에서 물러난 뒤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전무이사를 맡았다. 산업유산국민회의는 정부로부터 용역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자료와 증언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유산국민회의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 ‘군함도의 진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연구자들이 남긴 증언을 반박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해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탑재하고 있다. 특히 하시마에 거주했던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이 사이 좋게 지냈다, 하시마라는 가족적인 일체감을 갖고 있었다’는 증언을 통해 강제노동이나 차별을 부정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지화와 옛 하시마 섬에 대한 향수와 향토애를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

리한 내러티브만 구사하고 있다.

-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의 큐슈 지역 답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각지의 산업 유산에서 ‘전체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시설물 위주의 안내만 주를 이뤘고, 현장 해설가나 자원활동가들의 설명 역시 유산의 기술적인 설명에 치우쳐 있었다. 2017년에 비해 올해는 해설가 일부가 과거 산업시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교체되어 기술적인 설명이 좀 더 풍부해졌을 뿐 ‘전체 역사’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 2014년 이후 일본 우익들의 유엔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위안부의 진실 국민운동’ 국제역사논전연구소, 새로운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대표적인 우익단체들이 유엔의 인권 관련기관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서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가 유엔에서 중요한 의제로 제기될 전망이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계기로 식민지배 책임과 강제노동 문제가 한일간의 역사갈등·경제갈등·군사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따라서 강제동원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제법과 국제사례를 조사하여 대응논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료의 수집과 체계적인 정리 및 영어 등 외국어 번역을 통해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치며, 2020년 도쿄에 개설될 ‘정보센터’의 내용을 한일 공동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교섭이 필요하다.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내용과 문제점

김청중

(세계일보 일본 특파원)

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내용과 문제점

김청중(세계일보 일본 특파원)

산업유산국민회의 정부 제출 보고서 검토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산업유산국민회의 정부 제출 보고서 검토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과제

나카타 미쓰노부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明治産業革命遺産問題についてのこれまでの 取組みと今後の課題

中田光信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문제를 둘러싼 지금까지의 활동과 향후 과제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1.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싼 진상규명네트워크의 지금까지의 활동

〈1차 성명〉 2015.06.11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등재 당시 “1. 일본정부는 과거와 성실하게 마주하고 전 시기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일본정부는 시기 구분, 등재 대상을 재검토하여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역사에 입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세계유산 등재 시에는 유네스코의 이념인 평화와 인권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3가지 항목을 해당 자산(야하타제철소, 가마이시제철소, 미쓰이미이케탄광, 미쓰비시중공 나가사키조선소, 다카시마탄광, 하시마(군함도)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중국인·연합군 포로 강제노동 사실의 원전(原典)을 보여주는 자료를 첨부해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과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2차 성명〉 2015.09.09

그리고 등재 직후에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취지에 비추어 “올바른 역사의 기재가 누락되어 보편적 가치”가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강제노동이 ILO 제29호 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것은 조선인만이 아니며 중국인·연합군 포로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강제노동’에 대한 견해를 규탄하고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의 인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구집회 등의 활동〉

연 1회 열고 있는 연구집회에서도 이 문제를 주제로 정해 다양한 보고를 해 왔다. 또 2018년 6월 23일에는 더 많은 해당 자산이 위치한 나가사키에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열었다. (관련 연표 참조)

〈이코모스에 의견서를 제출〉 2018.05.18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사전에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연명으로 6가지 항목에 걸친 의견서를 제출했다.¹⁾

2. 식민지 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유네스코 결의·권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일본정부와 산업유산국민회의

2017년에 일본정부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보전상황보고서는 2015년 등재 당시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²⁾ 이에 더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 온 ‘일반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이하 “산업유산국민회

1) 요청 내용은 이하 6개 항목

1.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제출한 보전보고서를 위원회의 결정, 국제사회에 밝힌 일본정부의 약속과 유적 해석에 관한 국제기준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고 모니터링 할 것;
2. 일본정부가 밝힌 현재의 해석전략으로는 ‘역사 전체’를 충실하게 전달(present)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힐 것;
3. 한국인, 중국인과 연합군 포로들의 강제노동을 산업유산의 ‘역사 전체’에 포함시킬 것;
4.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이 제2차 세계대전, 즉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을 ‘역사 전체’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5. 일본정부의 해석전략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강제동원 관련 민간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할 것;
6. 일본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일본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취하도록 촉구할 것.

2) 2017년 12월 1일자 일본정부의 보전상황보고서에 관한 권고g)의 주기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을 일개 민간기관인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위탁한 점(통째로 말김)
- ‘지금까지 거의 검토된 적 없는 1차 사료의 조사’를 추진한다는 핑계를 들어 기존 연구 성과를 무시
-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대신 ‘지원했다’(support)를 사용
- 중국인·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을 무시.
-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해당 자산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에 설치
- 역사학자나 자산 주변의 관계자 및 강제노동을 강요당한 당사자의 증언이 누락되어 있고 이코모스 각 현장에도 밝히는 ‘해석 감사’(Interpretation Audit)

의”)와 일본정부의 수상쩍은 유착 관계가 밝혀졌다.

일본정부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 ‘산업 노동에 관한 조사’를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위탁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우연 박사의 집필로 추측되는 논문의 번역이 실려 있으며, 하시마(군함도)·미쓰이미이케탄광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가 검증 없이 기록되어 있는 등, 역사를 왜곡하는 단편적인 자료가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등재 시설 전체에 대한 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아 ‘역사 전체’를 해석(Interpretation)하는 기초 자료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날조된 보고서를 둘러싸고 3년간 총 약 3억 6천만 엔의 계약금이 산업유산국민회의에 흘러들어간 사실이 정보공개로 밝혀졌다(자세한 내용은 고바야시 보고서를 참조).

3. 2019년 보전상황보고서³⁾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17년 보전상황보고서를 검토한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재차 권고⁴⁾ 사항을 제시한다. 권고 사항은 “개관 예정인 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계획되어 있음”에 유의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포함된 기간 동안과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 자산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이나 디지털 형식의 해석 자료에 관

3) https://www.cas.go.jp/jp/sangyousekaiisan/seikaiisan_houkoku/pdf/191129/siryu_jp00.pdf(일본어)
<https://whc.unesco.org/en/documents/179734>(영어)

4) 제42차(2018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 권고g)와 관련한 부분을 발췌

세계유산위원회는

1. WHC/18/42.COM/7B의 문서를 검토하고,
2.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2015년 독일 본)에서 채택한 결의문 39 COM 8B.141을 상기하면서, 3~6 생략
3. 모든 구성 자산에 해석이 준비되어 있고 디지털 형식의 틀이 개발되었지만 개관될 정보센터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개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유의하고,
4. 센터가 완공되는 대로 전반적인 해석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당사국에 추가로 요청하며,
5.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포함된 기간 동안과 그 외의 기간에 있어서 자산의 역사 전체에 대한 해석이나 디지털 형식의 해석 자료에 관한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때에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독려하며,
6. 관련 당사국(parties)간의 지속적인 대화(continuing dialog)를 독려하고,
7. 결의 39 COM 8B.141을 완전히(fully) 이행하고 더불어 2020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 1일까지 자산 보전 상황과 위 결정의 이행 상황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한 작업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때에 해석 전략(interpretive strategy)에 관한 국제적인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과 “당사국간에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진상규명네트워크도 적절한 해석 계획의 책정을 촉구하고자 작년 11월 1일자로 ‘산업 노동에 관한 조사’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일본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조사는 내용이 충분해 재조사하지 않을 것이다”는 구두 답변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29일자로 유네스코에 제출된 보전상황보고서의 요약본(Executive Summary)에는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석 전략을 토대로 적절히 해석이 실시되었다” “당사국과의 대화의 경우,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당사국간에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폭넓게 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해석 전체에 대해서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완공되는 대로 재차 보고하겠다”로 끝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치를 위한 검토·준비’에 대해서는 “해석 전략을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 기존 시설(도쿄도 신주쿠구 와카마쓰초)의 개수공사를 실시하는 등,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센터는 연내를 목표로 설치할 예정이다”고 하고 있다. 즉 당사국과 폭넓은 대화를 추진해 왔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와 각 자산의 ‘전체 역사’에 정통한 전문가나 시민단체와의 대화 없이 권고를 무시한 채 도쿄의 정부청사에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설치를 강행했다.

〈당면 활동과 과제〉

6월에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에 대한 비판
일본정부와 산업유산국민회의의 수상쩍은 유착관계의 추궁과 폭로
제44차 세계 유네스코유산위원회의 중지에 따른 향후 활동의 검토

관련 연표

- 2015년 6월 11일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 관한 성명(1차 성명) 발표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 2015년 7월 5일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독일 본)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 세계유산 등재
 - 2015년 9월 9일 ‘강제노동’의 사실을 인지하고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2차 성명)
 - 2016년 3월 5일 제9회 강제동원진상규명 전국연구집회 개최
주제 ‘조선인 강제노동과 세계유산 문제’(아이치현 아이치노동회관 동관)
▽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탄광과 강제노동 - 나가사키의 산업혁명유산을 중심으로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회원)
▽ 전시 하 미쓰이미디어탄광과 외국인 노동자
히로세 데이조(広瀬貞三·후쿠오카대학)
▽ 관광지, 왜곡된 교육 자료로 선전되는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야하타제철소
가네자키 히카루(兼崎暉·야하타제철소의 전 징용공 문제를 추궁하는 모임)
▽ 가마시와 역사의 계승 -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서 생각한다
아마모토 나오요시(山本直好·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 2017년 3월 25일 제10회 강제동원진상규명 전국연구집회(나가사키현 아가타의 숲 문화회관 강당)
주제 ‘강제연행·강제노동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제3부 ‘메이지 산업 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 문제 제기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도쿄대학 교수)
▽ 「가마시와 전쟁의 계승 - 함포 전재(戰災)·강제동원」
아마모토 나오요시(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 「야하타제철소에서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하여」
나카타 미쓰노부(中田光信·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 〈지면 보고〉
- ▽ 「조선인의 증언을 통해서 보는 미쓰이·미디어탄광」
히로세 데이조(후쿠오카대학)
 - ▽ 「군함도」(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둘러싼 최근 동향
시바타 도시아키(柴田利明·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사무국장)

- 2017년 7월 5일 한일공동성명 발표
메이지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2년을 맞아
“강제노동 현장에 스며 있는 피해자들의 피와 땀,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라!”
한국: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 재한근인군속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
송을 지원하는 모임,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일본제철 전 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노!합사(NO!舎祀), 강제동원진상
규명네트워크
- 2017년 9월 1일~5일 한국 유네스코·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
- 2017년 10월 23일 나가사키 시장 앞으로 질의서를 제출
나가사키시의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질의서
- 2017년 11월 26일 가이드북 『일본의 메이지 산업 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발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민족문제연구소
- 2017년 11월 30일 ▽ 일본정부 보전상황보고서를 제출
- 2017년 12월 4일 한일시민이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 가이드북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발간에 즈음하여 일본에서 출판 기자회견을 개최(고베시 시정기자클럽)
- 2018년 3월 17일 제11회 강제동원진상규명 전국연구집회 오키나와(오키나와대학 동창회관)
▽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미이케·다카시마 등 규슈 탄광으로 끌
려온 조선인 동원수
- 석탄통제회 후쿠오카지부 관내 탄광현황조사표를 바탕으로- 다케우치 야스토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2018년 5월 18일 이코모스(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 의견서를 제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제철·제강, 조선, 석탄산업」에 관한
일본정부의 보전보고서에 대한 한일시민단체의 의견서
민족문제연구소·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 2018년 6월 23일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 나가사키집회(나가사키현 근로복지회관)
개최
▽ 강연 1 「우리들」의 역사와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
도노무라 마사루(도쿄대학 교수)
▽ 강연 2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강제노동 10가지 시점
다케우치 야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각 지역·현장의 강제노동 실태>
▽ 전시 하 나가사키의 중국인·POW 강제노동
히라노 노부토(平野 伸人·나가사키의 중국인 강제연행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 나가사키의 조선인 강제노동
신카이 도모히로(新海智弘·준신여자고등학교 비상근강사)
▽ 미쓰이·미이케탄광과 강제노동 「미쓰이·미이케 관련 보고」
城野 俊行(전 오무타지구 고등학교 인권·동화교육연구협의회 회장)
▽ 야하타제철소와 강제노동 「세계문화유산으로 숨김 없이 역사를 기재하자」
가네자키 히카루(야하타제철소의 전 징용공 문제를 추궁하는 모임)
- 2018년 6월 24일~7월 4일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바레인 마나마)
▽ 일본정부에 새로운 권고 사항을 제시(WHC/18/42.COM/7B.Add.2)
- 2018년 8월 20일 제42차 세계유산회의의 권고 후 산업유산의 세계유산등재추진실과 교섭
(도쿠나가 에리 참의원 의원실)
- 2019년 11월 1일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 유산’의 산업 노동에 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
- 2019년 11월 29일 ▽ 일본정부 보전상황보고서를 제출
- 2020년 3월 31일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단, 코로나19로 인해 공개 연기)
- 2020년 6월 15일 산업유산정보센터 일반에 공개

明治産業革命遺産問題についてのこれまでの 取組みと今後の課題

中田光信(나카타 미쓰노ぶ,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1. 「明治産業革命遺産」に関する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のこれまでの取組み

＜第1次声明＞2015.06.11

明治産業革命遺産の登録に際して「1 日本政府は過去に誠実に向き合い、戦時期の強制連行・強制労働についての認識を明確にすべきである」「2 日本政府は、時期区分、登録対象を見直し、強制連行・強制労働の歴史をふまえて申請すべきである」「3. 世界遺産の登録ではユネスコの理念である平和や人権をふまえるべきである」との3項目について該当資産（八幡製鉄所、釜石製鉄所、三井三池炭鉱、三菱重工長崎造船所、高島炭鉱、端島（軍艦島））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の強制労働の事実についての原典を示した資料を添付して「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と共同で声明を発表した。

＜第2次声明＞2015.09.09

そして、登録直後には明治産業革命遺産についてはユネスコ世界遺産の趣旨からして「正しい歴史の記載なくして普遍的価値」がないこと、国際的にも強制労働がILO29号条約違反であること、強制労働を強いられたのは朝鮮人だけでなく中国人・連合軍捕虜も含まれることを指摘し、日本政府の「強制労働」についての見解を糾し「強制労働」の歴史的事実の認知を求める声明を発表した。

＜研究集会などの取組み＞

年1回開催している研究集会においてもこの問題をテーマとしてとりあげ様々な報告を行ってきた。また2018年6月23日にはもっとも多く該当資産のある長崎において「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をテーマに集会を開催した。（関連年表参照）

＜イコモスへの意見書＞2018.05.18

第42回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に向けて、事前にイコモス（国際記念物遺跡会議）へ民族問題研究所との連名で6項目にわたる意見書を提出した¹⁾。

2. 植民地支配の歴史を否定しユネスコ決議・勧告を無視し続ける日本政府と産業遺産国民会議

2017年に日本政府がユネスコに提出した保全状況報告書は、2015年の登録時の勧告を全く無視する内容であった²⁾。そして明らかになったのは、明治産業革

1) 以下6項目の要請内容

1. 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は、日本政府が提出した保全報告書を、委員会の決定と国際社会に明らかにした日本政府の約束、遺蹟解釈に関する国際基準に鑑み、持続的かつ徹底的に審査し、監視すること。
2. 日本政府が明らかにした現在の解釈戦略では、「歴史全体」を忠実に伝達（present）し得ないことを明確に示すこと。
3. 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の強制労働を産業遺産の「歴史全体」に盛り込ませること。
4.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が第二次世界大戦、つまりアジアと太平洋地域における侵略戦争において遂行した役割を「歴史全体」に盛り込み、示させること。
5. 日本政府の解釈戦略事業の透明性を確保し、強制動員関連民間団体と専門家の参与を確保すること。
6. 日本政府が世界遺産委員会の決定と日本政府の約束を履行するために必要具体的な措置を国際基準に見合った形でとるよう促すこと。

- 2) 2017年12月1日付の政府保全状況報告書における勧告g)の注記に関する問題点は主に以下の点にまとめられる。
 - ・「朝鮮人労働者を含む労働者に関する情報収集」を一民間機関である産業遺産国民会議へ委任（丸投げ）
 - ・「これまでほとんど検討されなかった一次史料の調査」を進めるとして従来の研究成果を無視
 - ・「強制労働」（forced to work）という文言を「支えた」（support）に「言い換え」
 - ・中国人・連合軍捕虜の強制労働については無視。
 -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を該当の資産から遠く離れた東京に設置
 - ・歴史学者や資産周辺の関係者及び強制労働に従事させられた当事者の証言抜きに実施されたイコモス各憲章にも反する「インタビューレーション監査」

命遺産のユネスコ登録を推進してきた「一般財団法人産業遺産国民会議」（以下、産業遺産国民会議と略す）と日本政府との異常な癒着関係であった。

日本政府はユネスコの勧告を受けて「産業労働にかかる調査」を産業遺産国民会議に委託したがその報告書には李宇衍（イウヨン）氏の執筆と推測される論文の翻訳や端島（軍艦島）・三井三池炭鉱の関係者への検証抜きのインタビュー記録など歴史を歪曲する断片的な資料などが掲載されているがサイト全体についての調査はほとんどなされず「全体の歴史」を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する基礎資料としては全く不十分かつ不適切である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しかもこのような杜撰な報告書に対して3ヶ年合計で3億6千万円余の契約金が産業遺産国民会議に支払われた事実が情報公開により判明した。（詳しくは小林レポート参照）

3. 2019年の保全状況報告書³⁾の問題点と今後の課題

2017年の保全状況報告書を審査した2018年の第42回世界遺産委員会は改めて勧告⁴⁾を出した。勧告は「開設予定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を含め更なる

3) https://www.cas.go.jp/jp/sangyousekaiisan/seikaiisan_houkoku/pdf/191129/siryuu_jp00.pdf（日本語）
<https://whc.unesco.org/en/documents/179734>（英語）

4) 第42回(2018年)世界遺産委員会決議の勧告g)に関する部分を抜粋

世界遺産委員会は、

1. WHC/18/42.COM/7Bの文書を審査した上で；
2. 第39回世界遺産委員会（2015年ボン）で採択された決議39COM8B.141を想起し；
- 3～6. 略
7. 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が全てのサイトで準備され、デジタル形式のツールが開発された一方、開設予定の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を含め更なる改善が図られる予定であることに更に留意し；
8. センターが完成され次第、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全体について改めて報告するよう締結国に更に要請し；
9. OUVによってカバーされている期間及びそれ以外の期間も含め、資産の歴史全体の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やデジタル形式の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資料に関する作業を引き続き行う上で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に関する国際的なベストプラクティスを考慮に入れるよう締結国に強く促し；
10. 関係者との対話を継続することを促し；
11. 決議39COM8B.141を完全に履行するとともに、2020年の第44回世界遺産委員会による審議に付するため、2019年12月1日までに、資産の保全状況と上記の履行状況について更新した報告書を世界遺産センターに提出するよう締結国に更に要請する。

改善が図られる予定であることに」留意して「OUVによってカバーされている期間及びそれ以外の期間も含め、資産の歴史全体の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やデジタル形式の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資料に関する作業を引き続き行う上で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に関する国際的なベストプラクティスを考慮に入れること」と「関係者との対話を継続すること」を指摘した。

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としても適正な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計画を策定させるために昨年11月1日付で「産業労働の調査」について再調査が必要である旨の要請書を提出したが日本政府からは「産業遺産国民会議の調査は十分な内容であり再調査はしない」との口頭の回答がなされただけであった。

そして昨年11月29日付でユネスコに提出された保全状況報告書のエグゼクティブサマリーには「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は、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に基づき、適切に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が実施された」「関係者との対話について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関係者間において、定期的に協議を行い、幅広い対話に努めてきた」などと記載され「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全体については、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が完成され次第、改めて報告する」として具体的内容を明らかにしなかった。そして「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設置に向けた検討・準備」は「インタープリテーション戦略に基づき、国内外の有識者の意見も踏まえつつ、既存施設（東京都新宿区若松町）の改修工事を行うなど着実に準備を進めている。同センターは、今年度中を目途に設置する予定である。」として関係者との幅広い対話に努めてきたと言いながら韓国政府や各資産の「全体の歴史」に詳しい専門家や市民団体との対話も一切行うこと無く勧告を無視して東京の政府庁舎への「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の設置を強行した。

<当面の取組みと課題>

- 1) 6月にオープンした「産業情報センター」の展示内容への批判
- 2) 日本政府と産業遺産国民会議との異常な癒着関係の追及と暴露
- 3) 第44回世界ユネスコ遺産委員会の中止を受けて今後の取組みの検討

関連年表

- 2015年6月11日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世界遺産登録問題についての声明（第1次声明）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
- 2015年7月5日 第39回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於 ドイツ ボン）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鉄鋼、造船、石炭産業」世界遺産登録に登録
- 2015年9月9日 「強制労働」の事実を認知し「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への記載を求める声明（第2次声明）
- 2016年3月5日 第9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
テーマ「朝鮮人強制労働と世界遺産問題」（於 愛知県 愛知労働会館・東館）
▽三菱重工業・三菱鉱業と強制労働 ―長崎の産業革命遺産を中心に
竹内康人（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会員）
▽戦時下の三井三池炭鉱と外国人労働者 広瀬貞三（福岡大学）
▽観光スポット、歪められた教育資料として宣伝される『「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八幡製鉄所
兼崎暉（八幡製鉄所の元徴用工問題を追求する会）
▽釜石と歴史の継承―世界遺産登録問題から考える
山本直好（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 2017年3月25日 第10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於 長野県あがたの森文化会館講堂）
テーマ「強制連行・強制労働をどう伝えるか？」第3部「明治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
▽問題提起 東京大学教員 外村大
▽「釜石と戦争の継承―艦砲戦災・強制動員」 山本直好（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八幡製鉄所における強制連行・強制労働について」 中田光信（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紙上報告＞
▽「朝鮮人の証言から見る三井・三池炭鉱」 広瀬貞三（福岡大学）
▽「軍艦島」（端島）の世界文化遺産登録問題をめぐる最近の動向
柴田利明（長崎在日朝鮮人の人権を守る会事務局長）

- 2017年7月5日 日韓共同声明
明治日本の産業施設の世界遺産登録2年を迎えて
「強制労働の現場にしみ込んだ被害者の血と汗、涙の歴史を記録せよ！」
韓国：太平洋戦争被害者補償推進協議会、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民族問題研究所、靖国反対キャンドル行動韓国委員会、フォーラム真実と正義、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過去事清算委員会
日本：在韓軍人軍属裁判の要求を実現する会、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する会、朝鮮人強制労働被害者補償立法をめざす日韓共同行動、日本製鉄元徴用工裁判を支援する会、
ノー！ハプサ（NO！合祀）、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 2017年9月1日～5日 韓国ユネスコ・民族問題研究所とともに現地調査
- 2017年10月23日 長崎市長あて質問書提出
長崎市の『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製鋼、造船、石炭産業』に関する質問書
- 2017年11月26日 ガイドブッ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発行
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民族問題研究所
- 2017年11月30日 ▽日本政府 保全状況報告書提出
- 2017年12月4日 日韓市民による世界遺産ガイドブック「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
発行にあたって日本で出版記者会見 神戸市市政記者クラブ
- 2018年3月17日 第11回強制動員真相究明全国研究集会・沖縄（於 沖縄大学同窓会館）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三池・高島など九州の炭鉱への朝鮮人動員数
―石炭統制会福岡支部管内炭礦現況調査表から―竹内康人（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 2018年5月18日 イコモス（国際記念物遺跡会議）へ意見書提出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製鉄・製鋼、造船、石炭産業」に関する日本政府の保全報告書に対する日韓市民団体の意見書
民族問題研究所・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2018年6月23日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と強制労働 長崎集会（於 長崎県勤労福祉会館）

▽講演1 「私たち」の歴史と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 外村大（東京大学教授）

▽講演2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強制労働 10の視点

竹内康人（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

<各地域・現場における強制労働の実態>

▽戦時下長崎における中国人・POW強制労働

平野 伸人（長崎の中国人強制連行裁判を支援する会）

▽長崎の朝鮮人強制労働 新海智弘（純心女子高等学校非常勤講師）

▽三井三池炭鉱と強制労働 「三井・三池関連からの報告」

城野 俊行（前大牟田地区高等学校人権・同和教育研究協議会会長）

▽八幡製鉄所と強制労働 「世界文化遺産として隠さず歴史の記載をしよう」

兼崎 暉（八幡製鉄所の元徴用工問題を追及する会）

2018年6月24日～7月4日 第42回ユネスコ世界遺産委員会（於 バーレーン マナマ）

▽[日本政府への新たな勧告\(WHC/18/42.COM/7B.Add.2\)](#)

2018年8月20日 第42回世界遺産会議の勧告を受けて産業遺産の世界遺産登録推進室交渉

（於 徳永えり参議院議員室）

2019年11月1日 「明治日本の産業革命遺産」の産業労働に関する再調査を求める要請書を提出

2019年11月29日 [▽日本政府 保全状況報告書提出](#)

2020年3月31日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開所（ただしコロナ感染防止のため公開延期）

2020年6月15日 産業遺産情報センター一般公開

memo

memo

memo
